

의안 번호	1371	【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7. 6. 30.(금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1.(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조례명을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추가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변경 :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- 나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1조 및 제2조)
 - 지방재정심의위원회 ⇒ 지방재정**계획**심의위원회
- 다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제6호)
- 라.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
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(안 제2조제2항)
- 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다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등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거법규

지방재정법

제33조[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] ① ~ ⑧ (생략)

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**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** <개정 2014.5.28.>

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⑪ (생략)

제37조의2[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]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**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**

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**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**"는 "**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**"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제60조[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] ① ~ 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**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**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**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**"는 "**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**"로 본다.

④ ~ ⑥ (생략)

- 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**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 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 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[정책결정과정 참여]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⑤ (생략)